

IMF관리체제이후 전북지역의 노동시장 동향과 실업

남 춘 호*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을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안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은 실업대란시대에 완충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고용 흡수력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율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s)효과로 인하여 실업률은 낮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재)취업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편 여성실업자의 경우 50%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저학력층과 고령층, 생산직, 임시고일고등의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구직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나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생산적복지(workfare)가 그 이름에 값히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단어: 경제위기, 실업률, 실망노동자, 불안전취업, 장기실업.

*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1. 서론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전반적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정점에 달하였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기업의 부도와 산업생산의 감소, 대량 실업등으로 사회전반이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98년 한해 동안 총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긴급히 투입하는 등 대량실업 사태를 진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99년들어 외환보유고가 600억불을 넘어서고 산업생산과 주가지수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실업문제는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전망속에 파묻혀 버렸다. 경기회복으로 이제 실업문제는 안정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은 정부의 2000년도 예산안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그 결과 직접적인 실업관련 예산은 99년도의 3조2천5백억원에서 1조5천6백억원으로 50%이상 삭감되었다¹⁾

그렇지만 부도율의 하락이나 산업생산의 회복, 종합주가지수의 변화 등과 비교해 볼 때 고용의 회복은 매우 더딘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99년 8월 현재 전국의 실업자수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124만 1천명이고 실업률은 5.7%이다. 이는 98년 8월에 비해 실업자수로는 33만 3천명, 실업률로는 1.5% 하락한 것이다. 종합주가지수가 98년초의 최저치에 비해 3배이상 폭등한 데 비하면 실업문제는 여전히 작년에 비해 약간 개선된 수준에 불과하며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하겠다. 아니 실업문제에 관한 한 IMF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도 보인다. 왜냐하면 현재의 실업은 경기적 실업이라는 성격외에, 산업

1) 그렇지만 정부의 실업관련예산은 그동안 자의적으로 부풀려 발표되어온 점이 적지 않다. 사실 노동수요가 상품수요의 파생수요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경제정책 전반의 예산을 모두 실업예산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고용안정과 실업대책이라고 할 수 없는 것까지 실업예산에 자의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해 온 점은 '통계는 권력'이라는 점을 절실히 보여준다. 그런점에서 여기서는 실업관련 직접예산만 비교해 보았다. 현재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2000년도 실업관련 예산안을 세부항목별로 보면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2조1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57% 감소하였으며, 한시적 생활보호예산이 6천3백억원에서 4천6백억원으로 감소하였다.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분야의 예산 역시 3296억원에서 2710억원으로 15% 가량 삭감되었다(기획예산처, 1999).

구조조정에 기인하는 구조적실업이라는 특성 또한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2002년까지의 실업률 목표치를 4% ~ 5%로 잡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전북의 경우에는 8월 현재 실업자수는 3만6천명, 실업률은 4.0%이다. 이는 전국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이다. 그리고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실업자수 1만5천명 실업률은 1.7% 감소한 것이다. 각종 경기지표들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여도 실업률은 1년이상 지나야 회복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며, 지난 1년간 우리기업들이 주로 고용감소를 통한 성장전략을 펴온 점에 비추어 본다면 경제의 회복에 따른 고용의 회복과 실업문제의 해소는 아직은 낙관할 수만은 없다.²⁾

실업 상황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통계에는 오랫동안 취업이 안되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는 빠져 있다. 경제활동참가률의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정할 결과에 의하면 실망노동자로 전락한 실업자의 수는 전라북도의 경우 약 10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전북지역의 경우 실업대책은 4만명이 아니라 14만명을 대상으로 수립 집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성제환, 1999). 또한 실업문제는 취업자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취업자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 주당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어서 최소한의 생계비 수입도 올리지 못하는 불완전취업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IMF 사태이후 1년반이 경과하면서 실업자들 중에서 재취업하지 못한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빈곤층이 점차 퇴적되고 있다. 실업의 문제 중에서도 심각한 것은 장기실업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OECD국가들은 과거 1980년대에 이미 장기실업의 고통을 겪은 바 있고 일부 국가들은 아직도 그 병폐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 특히 장기실업 문제가 우려되는 이유는 한국은 아직 사회 안전망이 발달되지 않아서 장기실업자들의 생계위협 문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장기실업률은 6개월을 장기실업의 기준으로 할 때 1998년에는 15.7%이었으나 1999년에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신동균, 1999). 일반적으로 장기실업자의 발생은 저성장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기후퇴에 따른 총체적 고용흡수력의 감퇴에 의해 실업이 발생하고, 이후 경기가 반

2) 여기에 덧붙여 외환위기를 우리보다 앞서 경험했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함정까지 고려한다면 고용회복에 대한 장기적 전망에는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전되어도 단기실업자나 신규 진입자들이 장기실업자보다 우선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결국 장기 실업의 규모는 경기 후퇴를 경험할 때마다 누적되는 성향을 보인다 (Walsh, 1987; Sorrentino, 1995; Jackman and Layard, 1991).³⁾

우리사회의 경우에도 실업자의 특정계층이 경기회복시기에도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실업자화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하겠다.

1997년말 집권에 성공한 국민의 정부는 당면한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멕시코의 세디요 정부와 그 정책들을 모범으로 따르겠다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워싱턴 컨센서스를 충실히 따른 결과 IMF의 장학생으로까지 불렸던 멕시코의 실상은 고용없는 성장(jobless growth), 엄청난 규모의 실업 및 반실업, 바닥을 모르는 저임금 등으로 광범위한 계급갈등과 정치불안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이성형 1998). 이는 99년 3월 멕시코시티 중앙광장에 운집한 10여만 명의 실업자와 농민, 도시빈민들이 세디요정권의 퇴진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철폐를 요구한 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답습할 경우 우리사회도 빈부의 양극화와 계층갈등의 심화라는 함정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외환위기 이후 2년 가까이 경과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초기의 경제적 위기에서 사회적 위기로 급속히 전화하고 있다. 실업은 단순히 경제적 현상만은 아니며 더욱이 실직자 개인에 한정된 문제는 더 더욱 아니다.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의 실직은 경제적 파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직자 자신의 심리적 파탄과 자아분열, 이혼, 가출, 범죄, 자살, 약물중독, 청소년 문제 등으로 이어져 가정을 파괴하고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안병철, 1999). 또한 멕시코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을 방치할 경우 이는 자칫 빈부격차의 확대와 계층간 갈등의 심화로 이어져 결국 우리 사회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성경룡,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의 하락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실업률 통

3) 장기실업자들은 흔히 이중문제(dual problem)에 직면하게 된다. 실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실업자들 스스로도 의욕상실로 인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고, 고용주들 역시 장기 실업자들은 기피하게 된다. 고용주들이 장기실업자들을 기피하는 이유는 기간의존성효과(duration dependence effect)와 이질성효과(heterogeneity effect) 때문이다(Layard and Nickel, 1986; Heckman and Borjas, 1980). 또한 장기실업은 산업구조조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구조조정은 양적인 면에서의 슬림화 뿐만 아니라 노동 수요의 성격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신동균, 1998)

계의 이면에 가리워져 있는 실업문제와 고용불안의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여기서는 실망노동자의 증대와 고용불안의 심화, 장기실업자의 퇴적 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실업문제는 경제적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적 위기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생활세계속에서의 제반문제들, 예컨대 사회심리적 고통, 가족문제, 자아정체성의 문제 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서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99년 5월에 전주에서 실시한 실업자 실태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실업문제의 제반측면들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전북지역의 노동시장 동향과 실업률 추이

1) 중소기업 위주의 전북 지역경제

전국의 모든 지역과 국민들 중에서 외환위기로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있었던 경우는 없다. 그렇지만 수십년간 지속되어온 지역불균등 발전의 결과 각 지역의 경제구조에는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이에따라 IMF관리체제하의 경제위기가 미치는 영향도 지역에 따라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경제의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작은 가운데 영세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는 전체 기업 중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고, 종업원수 300인 이상의 대기업은 전체의 0.6%에 불과하다(남춘호 이성호, 1998). 대부분 외부 대기업과의 하청관계를 통해 한계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들 중소기업들은 현재의 경제위기를 견디어낼 수 있는 경제적 경쟁력이나 정치적 교섭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극심한 경기침체나 공황시기에는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룩해온 성과를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특히 한국처럼 기업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 그리고 비조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전라북도의 취약한 산업구조로 볼 때 전북지역의 노동자들이 겪고있는 고용불안과 실업, 그리고 임금삭감의 고통도 매우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⁴⁾

2) 월별 실업자 수 및 실업률 추이

전북의 실업률은 1999년 8월 현재 4.0%이고 실업자수는 3만 6천명이다. 실업률은 전국 평균 5.7%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97년까지 2%대에 머물렀던 실업률은 98년에는 5%대로 증가한 후 계절적 변동을 보이다가 99년 2월에는 실업자수 6만 6천, 실업률 8.4%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다행히 99년 3월 이후에는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그림II-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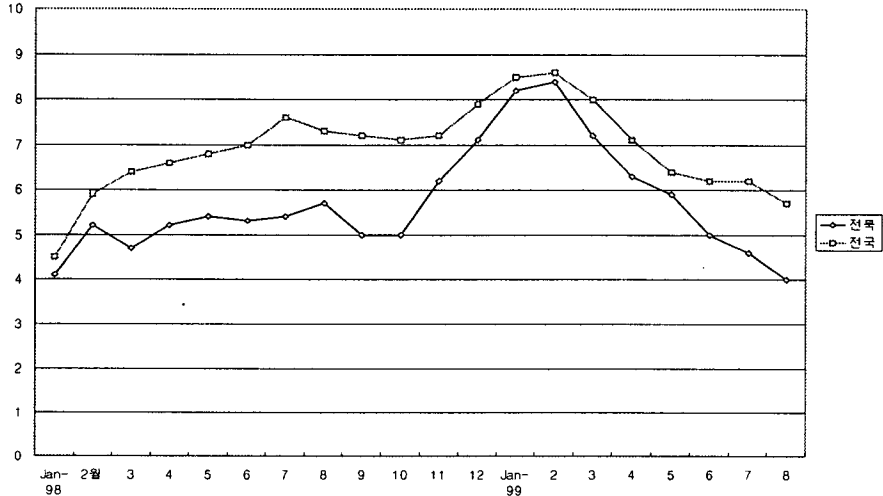
그러나 계절적 변화가 심한 농업과 건설업 취업자수가 전체의 35%를 넘는 전북의 경우 보다 정확한 추세의 파악을 위해서 전년동기 대비 실업자 수의 증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년동기대비 실업자수의 증감을 추이를 보면 98년 2/4, 3/4, 4/4 분기에는 140% 안팎을 넘나들었던 증감률이 99년 1/4분기에는 64.9% 그리고 99년 2/4분기에는 4.1%로 까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실업자수의 증가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99년 2/4분기에는 거의 전년동기와 같은 수준으로까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실업자의 절대수는 여전히 IMF이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 경제활동인구의 동향과 실망노동자의 증가

97년 2/4분기와 99년 2/4분기의 2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는 1만 8천명이 감소하였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3만명이 증가하였다. 동기간에 15세이상 인구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1만 9천명 정도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순증가가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경제위기로 인하여 여성들이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활동인구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겉으로 드러난 실업자만이 아니라 이들 실망노동자들의 고용문제도 주요한 정책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표II-1>참조)

4) 전북지역 경제의 취약성은 기업부도율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부도규모가 아니라 부도기업의 수로 보았을 경우에는 전북지역은 인천, 울산과 함께 외환위기 직후인 97년 12월에 가장 많은 부도를 기록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지역과 함께 자금경색이 가장 빨리 확산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김재훈, 1999).

〈그림 II-1〉 98년 이후 실업률 추이



〈표 II-1〉 15이상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

| | '97. 2/4 | '98. 2/4 | 전년동기대비 | | '99. 2/4 | 전년동기대비 | | 97년동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 | | | | | | | | |
| ○ 15세 이상 인구 | 1,477 | 1,485 | 8 | 0.5 | 1,488 | 3 | 0.2 | 11 | 0.7 |
| ┌ 남자 | 708 | 713 | 5 | 4.0 | 714 | 1 | 0.1 | 6 | 0.8 |
| └ 여자 | 769 | 772 | 3 | 0.4 | 774 | 2 | 0.3 | 5 | 0.7 |
| - 경제활동인구 | 914 | 919 | 5 | 0.5 | 896 | -23 | -2.5 | -18 | -2.0 |
| ┌ 남자 | 505 | 524 | 19 | 3.8 | 512 | -12 | -2.3 | 7 | 1.4 |
| └ 여자 | 409 | 395 | -14 | -3.4 | 384 | -11 | -2.8 | -25 | -6.1 |
| - 비경제활동인구 | 562 | 566 | 4 | 0.7 | 592 | 26 | 4.6 | 30 | 5.3 |
| ┌ 남자 | 203 | 189 | -14 | -6.9 | 202 | 13 | 6.9 | -1 | -0.5 |
| └ 여자 | 360 | 377 | 17 | 4.7 | 390 | 13 | 3.4 | 30 | 8.3 |

자료: 매월 고용동향 각월호(통계청 및 전북통계청)에서 제작성.

〈표 II-2〉 주당노동시간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 | '97. 2/4 | '98. 2/4 | 전년동기대비 | | '99. 2/4 | 전년동기대비 | | 97년동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 | | | | | | | | |
| ○36시간 미만 | 92 | 108 | 16 | 17.4 | 127 | 19 | 17.6 | 35 | 38 |
| ┌ 1-17시간 | 16 | 18 | 2 | 12.5 | 25 | 7 | 38.9 | 9 | 56 |
| └ 18-35시간 | 76 | 90 | 14 | 18.4 | 102 | 12 | 13.3 | 26 | 34 |
| ○36시간 이상 | 796 | 757 | -39 | -4.9 | 714 | -43 | -5.7 | -82 | -10 |
| ┌ 35-53시간 | 414 | 431 | 17 | 4.1 | 410 | -21 | -4.9 | -4 | -1.0 |
| └ 54시간 이상 | 382 | 326 | -56 | -14.7 | 304 | -22 | -6.7 | -78 | -20 |
| ○일시휴직 | 8 | 5 | -3 | -37.5 | 4 | -1 | -20 | -4 | -50 |

자료: 〈표 II-1〉과 동일.

4) 불완전 취업자의 증가

실업문제는 취업자의 고용의 '질'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 지난 2년동안의 주당 노동시간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주당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8%가 증가하였으나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0%가 감소하였다. 특히 생계유지가 가능한 최저 수준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힘든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는 무려 56%나 증가하여 불완전 취업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질적으로 반실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불완전 취업자들의 경우에는 현재의 정부 실업자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불완전취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서 전라북도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표II-2〉 참조)

98년 1/4분기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에서 18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은 전국평균이 2.2%인데 비해 전북지역은 6.0%였으며, 98년 4/4분기에는 전국평균이 2.6%인데 전북지역은 5.1%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일용노동자와 임시직의 상대적 비중 증가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5) 산업별 직업별 취업구조

이번에는 산업별 취업자수의 변화추이를 통해서 경제위기가 산업구조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산업별 취업자수의 변화추이를 보면 지난 2년 사이에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다. 이는 전국적인 경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2년간 3만 1천명(26.7%)의 취업자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건설업은 1만 7천명(22.7%)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2년동안에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뿐인데 이는 공공근로사업의 실행으로 공공서비스업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경제가 거의 전산업에 걸쳐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II-3〉 참조)

한편 이러한 산업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전반기(97년2/4분기부터 98년2/4분기까지)와 후반기(98년2/4분기부터 99년2/4분기까지)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는 전반기 1년동안에 급격하게 취업자 감소가 이루어지다가 후반기에는 감소 추세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음식숙박업과 농림어업 및 금융창고운수전기업에서는 전반기에는 감소가 없었으나 후반기에 들어서는 개인 및 공공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결국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개인서비스업 및 농업 부문이 전반기에는 어느 정도 제조업 및 건설업분야의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완충역할을 한 것으로 짐작되나 이 부문 역시 후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농업부문의 경우 전라북도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취업자 감소를 보여왔으나 초반기 1년간 감소를 멈춘 것은 어느 정도의 완충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일각에서 귀농을 실업대책으로 요란하게 내세운 것과는 달리 실제 실업자들의 실태조사결과에서는 귀농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응답자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농업부문의 역할은 실제로는 별로 크지 않았으며 이는 후반기 1년간의 농업 취업자수의 감소에서 바로 드러났다고 하겠다.⁵⁾

5) 전북지역의 경우 농업부문 취업자는 14만명에서 27만명사이로 농번기의 경우에는 전체취업자의 30%를 상회하고 있다. 농업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계절별 취업자수의 변화가 매우 심한데, 농번기로 향하는 시점에서는 어느정도 도시지역의 실업자들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전반기 1년동안에 취업자의 증가는 전년대비 1천명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인구의 표본이 매우 작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1천명 정도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 힘들다.

〈표 II-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 | '97. 2/4 | '98. 2/4 | 전년동기대비 | | '99. 2/4 | 전년동기대비 | | 97년동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 | | | | | | | | |
| 〈 전 체 〉 | 895 | 870 | -25 | -2.8 | 845 | -25 | -2.9 | -50 | -5.6 |
| ○농림어업 | 274 | 275 | 1 | 0.4 | 266 | -9 | -3.3 | -8 | -3.0 |
| ○광공업 | 119 | 95 | -24 | -20.1 | 86 | -9 | -9.5 | -33 | -27.8 |
| -제조업 | 116 | 94 | -22 | -19.0 | 85 | -9 | -9.6 | -31 | -26.7 |
| ○사회간접자본및 기타 서비스 | 503 | 501 | -2 | -0.4 | 494 | -7 | -1.4 | -9 | -1.8 |
| -건설업 | 75 | 62 | -13 | -17.3 | 58 | -4 | -6.5 | -17 | -22.7 |
| -도소매, 음식숙박 | 192 | 199 | 7 | 3.6 | 191 | -8 | -4.0 | -1 | -0.5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 164 | 162 | -2 | -1.2 | 176 | 14 | 8.6 | 12 | 7.3 |
| -전기·운수창고·금융 | 72 | 78 | 6 | 8.3 | 68 | -10 | -12.8 | -4 | -5.6 |

자료: 〈표 II-1〉과 동일.

〈표 II-4〉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

| | '97. 2/4 | '98. 2/4 | 전년동기대비 | | '99. 2/4 | 전년동기대비 | | 97년동기대비 | |
|---------------------|-------------|-------------|--------|-------|-------------|--------|-------|---------|-------|
| | | | 증감 | 증감률 | | 증감 | 증감률 | 증감 | 증감률 |
| | | | | | | | | | |
| 〈 전 체 〉 | 895 | 870 | -25 | -2.8 | 845 | -25 | -2.9 | -50 | -5.6 |
|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 101 | 109 | 8 | 7.9 | 105 | -4 | -3.7 | 4 | 4.0 |
| • 사무직 | 80 | 81 | 1 | 12.5 | 68 | -13 | -16.0 | -12 | -15 |
| • 서비스·판매직 | 186 | 180 | -6 | -3.2 | 181 | 1 | 0.6 | -5 | -2.7 |
| • 농림어업직 | 270 | 272 | 2 | 0.7 | 262 | -10 | -3.7 | -8 | -3.0 |
| • 기능·기계조작· 단순노무직 | 258 | 228 | -30 | -11.6 | 229 | 1 | 0.4 | -29 | -11.2 |

자료: 〈표 II-1〉과 동일.

생계형 서비스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전반기 1년동안에는 다소간의 증가를 보였으나 후반기에는 감소세로 돌아서서 실업자 흡수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점들은 농업이나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적어도 전북지역에서는 얼마나 무책임한 환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⁶⁾

한편 직업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보면 97년 2/4분기부터 99년 2/4분기 사이에 생산직은 2만 9천명(11.2%)감소하였고 사무직은 1만 2천명(15%) 감소하였다.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특기할 것은 농림어업직에서도 2년간 3.0%가 감소해서 고용불안의 완충효과가 기대보다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생산직의 경우에는 IMF 초기에 대폭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폭이 줄어든 반면에 사무직 취업자들은 98년 2/4분기까지는 감소를 보이지 않다가 98년 2/4분기 이후에 16%나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사무직 구조조정의 효과가 98년 중반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표II-4) 참조)

마지막으로 연령별 취업자수의 변화를 보면 취업감소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에 양극화되어 있는 특징적 구조를 보여준다. 즉 50세 이상의 취업감소와 29세 미만의 신규고졸, 대졸자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취업감소 현상이 초등학교 졸업자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초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직업전환 교육이나 재교육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장기실업화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6) 노동력 이동현황

(1) 월평균 노동력 이동현황

이번에는 98년 하반기와 99년 상반기로 나누어서 노동시장내에서의 동태적인 노

6) 김재훈(1999)에 의하면 97년1/4분기부터 98년1/4분기사이 전국적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부문의 취업자 감소가 있었으며, 98년1//4분기부터 99년 1/4분기사이에는 대체로 광역시도에서는 취업자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도지역에서는 소위 '생계형 서비스업'의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에는 이러한 전국적 추세와 일치하지 않으며, 김재훈의 글에서도 경기도지역이나 강원 전북등은 이와는 다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생계형 서비스업의 취업자동향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표 II-5〉 월평균 노동력 이동 현황

(단위 천명, %)

| 98년 하반기 | | 취업 | 실업 | 비경제활동 | 전체 |
|---------|-------|------------------|-----------------|------------------|-----------------|
| 전국 | 취업 | 18,543 (95.3) | 295 (1.5) | 625 (3.2) | 19,463 (100) |
| | 실업 | 455 (30.0) | 1,007 (66.3) | 192 (12.6) | 1,519 (100) |
| | 비경제활동 | 442 (3.3) | 233 (1.7) | 12,827 (95.0) | 13,502 (100) |
| 전북 | 취업 | 767 (93.99) | 9 (1.05) | 41 (4.93) | 817 (100) |
| | 실업 | 9 (18.78) | 36 (76.29) | 2 (4.93) | 47 (100) |
| | 비경제활동 | 20 (3.39) | 5 (0.90) | 556 (95.70) | 581 (100) |
| 99년 상반기 | | 취업 | 실업 | 비경제활동 | 전체 |
| 전국 | 취업 | 18,325 (96.1) | 256 (1.3) | 482 (2.5) | 19,062 (100) |
| | 실업 | 365 (24.2) | 970 (64.3) | 173 (11.5) | 1,507 (100) |
| | 비경제활동 | 646 (4.7) | 215 (1.6) | 12,923 (93.8) | 13,783 (100) |
| 전북 | 취업 | 733 (96.15) | 8 (1.07) | 21 (2.77) | 762 (100) |
| | 실업 | 12 (22.15) | 37 (70.53) | 4 (7.32) | 53 (100) |
| | 비경제활동 | 41 (6.71) | 6 (0.93) | 566 (92.35) | 613 (100)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재작성.

동력 이동현황을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고용동향에 대한 일정시점사이의 정태적 비교 분석만으로는 동태적인 이동의 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사이의 월평균 노동력 이동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이동의 규모에 있어서는 전국적으로나 전북지역에서나 모두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이동량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취업과 실업 사이의 이동이며,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이동량이 가장 작다. 99년 상반기 전국자료를 보면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으로 이동한 사람은 월평균 48만2천명이고 비경제활동에서 취업으로 이동한 사람은 64만6천명이다. 이에 비해서 취업에서 실업으로의 이동자는 25만6천명이고 실업에서 취업으로의 이동자는 36만5천명이다. 대체로 취업과 실업사이의 이동보다 취업과 비경제활동사이의 이동량이 많은 것은 대부분의 취업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활동을 계속하기 보다는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고, 또한 취업할 경우에도 구직을 계속하다가 취업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바로 취업하는 수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이런 통계는 실업을 지표만을 중시하는 근시안적 사고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II-5>> 참조)

이런 전체적 경향은 전북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다만 전북의 경우에는 취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전국보다 더 활발하고 나머지 취업과 실업,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⁷⁾

한편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전월의 실업자가 다음달에도 실업상태로 있을 확률이 64-66%이고 실업으로부터 재취업할 확률은 24-30%이며,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할 확률은 11-12%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실업지속률은 70-76%로 전국수준보다 높으며, 재취업확률과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할 확률은 각각 19-22%, 5-7%로 전국수준보다 낮다. 전북지역의 경우 실업으로부터 재취업할 확률이 낮고, 또한 실업지속률이 높은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⁸⁾

7) 노동력 이동 현황 분석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98년6월부터 99년7월)를 이용하였다. 매월15일 실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5년에 한번씩 표본을 선정하면 5년간은 누락자 대체분을 제외하고는 동일표본을 유지하므로 월별 노동력 이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유재우(1984), 김장호(1998), 신동균(1999), 최화정(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8) 모든 스톱변수와 플로우변수가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준제상태(steady state)를 가정하면 기대실업기간은 1/실업탈출률이 된다(김장호, 1998). 이식에 따라 기대실업기간을 구해보면 98년 하반기의 경우 전국적으로는 2.97개월이고, 전북에서는 4.22개월이 된다. 전북지역의 경우 기대실업기간이 전국수준보다 더 길어서 장기실업의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기대실업기간을 구한 결과는 일정시점에서 실업자를 조사하여 그들의 평균실업기간을 조사한 결과와는 상이하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8년 10월을 기준으로 실업자들의 평균실업기간을 구한 결과는 6.59개월로 나타나 본 연구의 기대실업기간보다 훨씬 길다. 이처럼 결과가 다른 이유는 첫째, 본연구에서는 98년6월부터

(2) 성별 노동력 전이률

다음에는 하위집단별로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률을 분석해 보았다. 취업정착률(ee)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 취업으로부터 실업으로의 전이률(eu)은 남성이 약간 더 크지만, 실업으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의 전이률(en)은 여성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취업으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의 전이률(en)의 남녀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취업으로부터 이탈할 전체 확률이 여성이 더 크고 반대로 취업정착률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더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인다.(<표II-6>참조)

반면 실업지속률(uu)은 남자가 더 크다. 이런 경향은 98년 하반기와 99년 상반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실업의 지속률이 여성이 더 낮다는 것은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여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업으로부터의 탈출중 재취업할 확률(ue)도 여성이 조금 더 높기는 했지만 비경제활동으로의 전이률(un)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컸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성의 탈출률이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자리를 잃으면 구직을 계속하면서 실업상태로 이행하기 보다는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상태로 이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자의 경우 취업정착률은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은 여성보다 낮아서 실업이 장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비경제활동으로부터 경제활동(취업과 실업)으로 이행한 사람중에 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 즉 진입성공률¹⁰⁾을 구해보면 98년 상반기의 경우 남자는 75.9%이고 여

12월사이에 한 번이라도 실업상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기대실업기간이 계산된 것임에 비하여 노동연구원의 자료에서는 특정시점에서 실업상태에 있었던 사람만 포함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업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과소표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노동연구원의 자료에서 말하는 실업기간은 엄밀하게는 실업상태에 있던 기간이라기 보다는 비경활상태에 있었던 경우도 포함된 무업기간이기 때문이다(각주 16 참고). 셋째로는 본 연구의 추정방식에서 가정된 균제상태가 급격한 경제변동에 적합하지 않은데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복의 기대실업기간이 전국수준에 비하여 높게 나온 점은 추정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9)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을 이용해서 기대실업기간을 구해보면 98년 하반기의 경우 남성은 4.67개월이고 여성은 3.36개월이다. 다행히 99년 상반기에는 기대실업기간이 남녀 모두 3.65개월과 2.96개월로 단축되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여성의 실업탈출률이 높은 것은 ue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로는 un이 크기 때문이므로 이는 주로 여성의 실망노동자화와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자는 79.2%였다. 즉 여자들의 경우에는 확실한 일자리가 있을 경우에만 비경제활동 상태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겠다.

다음에는 이달의 실업자들 중에서 지난 달에 취업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구성비가 어떤지를 실업으로의 유입이행확률(entry transition probability)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업자중 전달에도 실업상태에 있던 사람들의 비율(uu)은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다. 반면에 전달에 비실업상태(취업과 비경제활)에 있다가 실업으로 유입된 비율은 여성의 경우가 더 높다. 이로써 실업자 집단내의 유동성이 여성에게서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전월 취업상태에서 실업으로 유입된 비율은 남녀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는데 비해서 전월 비경제활에서 실업으로의 유입률은

〈표 II-6〉 성별 노동력 이동 현황(반기별)

(단위 %)

| | | ee | eu | en | ue | uu | un | ne | nu | nn |
|---------|----|-------|------|------|-------|-------|-------|------|------|-------|
| 98년 하반기 | 남자 | 96.03 | 1.27 | 2.71 | 18.55 | 78.60 | 2.85 | 3.67 | 1.23 | 95.10 |
| | 여자 | 91.21 | 0.75 | 8.05 | 19.39 | 70.21 | 10.40 | 3.26 | 0.75 | 95.99 |
| 99년 상반기 | 남자 | 97.05 | 1.14 | 1.81 | 21.22 | 72.63 | 6.15 | 6.03 | 1.58 | 92.39 |
| | 여자 | 94.89 | 0.98 | 4.13 | 24.07 | 66.22 | 9.71 | 7.05 | 0.62 | 92.34 |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서 재작성.

주) ee는 전월 취업상태(E)에 있던 사람 중에서 다음달에 취업상태(E)에 있는 사람의 비율이며, 마찬가지로 un은 전월 실업상태(U)에 있던 사람 중 다음달에 비경제활동상태(N)로 이행한 사람의 비율이다.

〈표 II-7〉 유입이행확률

(단위 %)

| | | eu | uu | nu |
|---------|----|-------|-------|-------|
| 98년 하반기 | 남자 | 16.97 | 76.53 | 6.50 |
| | 여자 | 17.58 | 62.22 | 20.20 |
| 99년 상반기 | 남자 | 14.86 | 75.82 | 9.31 |
| | 여자 | 18.12 | 67.12 | 14.76 |

자료: 〈표 II-6〉과 동일.

10) 비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취업한 사람의 비율을 진입성공률이라고 한다. 균제상태를 가정하면 진입성공률은 $ne / (ne + nu)$ 가 된다(김장호, 1999).

여성의 경우가 현저하게 더 높다. 전체적으로 유입이행확률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 실업과 비경활 사이의 이동이 왕성한 것으로 드러나 양자사이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불분명함을 드러내고 있다.(〈표 II-7〉참조)

(3) 연령별 노동력 전이를

연령별 노동력 전이를 살펴보면 취업정착률(ee)은 핵심연령층(25-54세)에서 높다. 그러나 일단 실업자가 된 이후 실업의 지속확률은 핵심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이는 핵심연령층의 경우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서 비경제활동상태로 퇴장할 확률(un)이 주변적 연령층에 비해 훨씬 낮고, 재취업 확률(ue)도 낮기 때문이다. 핵심연령층의 재취업확률이 낮은 것은 98년하반기와 99년상반기 사이에 창출된 일자리의 상당수가 임시 일용직등이어서 핵심연령층에서는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서 구직활동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신규고용창출에 있어서 핵심연령층의 재취업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¹¹⁾(〈표 II-8〉 참조)

취업상태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en)이나 실업상태로부터 비경제활동으로 이행할 확률(un)은 핵심연령층이 청소년층이나 노령층보다 낮다. 그렇지만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탈출률(ne+nu)은 핵심연령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핵심연령층이 가장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II-8〉 연령별 노동력 이동 현황(반기별)

(단위 %)

| | | ee | eu | en | ue | uu | un | ne | nu | nn |
|------------|----------|-------|------|------|-------|-------|-------|------|------|-------|
| 98년 하반기 | 24세 이하 | 90.15 | 2.40 | 7.44 | 19.83 | 73.63 | 6.54 | 2.09 | 1.07 | 96.84 |
| | 25 - 54세 | 95.53 | 1.24 | 3.23 | 18.24 | 77.30 | 4.46 | 5.17 | 1.48 | 93.35 |
| | 55세 이상 | 91.36 | 0.21 | 8.42 | 21.70 | 74.73 | 3.57 | 3.10 | 0.13 | 96.77 |
| 99년 상반기 | 24세 이하 | 91.94 | 2.55 | 5.51 | 24.26 | 65.95 | 9.79 | 2.46 | 1.11 | 96.43 |
| | 25 - 54세 | 96.63 | 1.19 | 2.18 | 21.28 | 72.74 | 5.98 | 8.96 | 1.44 | 89.60 |
| | 55세 이상 | 96.22 | 0.33 | 3.46 | 23.29 | 65.16 | 11.15 | 8.68 | 0.27 | 91.06 |

자료: 〈표 II-6〉과 동일.

11) 참고로 98년 1월에서 9월사이에 실업자의 재취업률은 전국자료에서는 핵심연령층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와서 전복의 자료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신동균, 1999)

(4) 학력별 노동시장 전이률

학력별로는 취업정착률이 대졸자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업으로의 전이률(eu)은 고졸자층에서 가장 높고 비경활로의 전이률(en)은 중졸이하층에서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단 실업자가 된 후에 실업으로부터 탈출할 확률(ue+un)은 대졸자가 가장 낮았다. 이는 특히 재취업률에서 대졸자층이 저학력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이다. 이점은 고학력자들의 기회비용이 높았던 데도 기인하겠지만, 98년하반기와 99년 상반기에 고학력자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별로 창출되지 않았고 주로 저임금 일용직위주로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5) 종사상지위와 실업: 임시고 일고 위주의 신규 고용창출

이번에는 취업자를 종사상지위에 따라 세분한 다음에 월평균 노동력 이동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해당 종사상 지위를 지속할 확률은 상시고(97.2%)나 자영업자(93.4%)에게서 높게 나왔고, 무급가족종사자(82.3%)나 임시고/일고(85.3%)층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각각의 종사상지위를 가진 사람들중에서 실업으로의 이행확률은

〈표 II-9〉 종사상지위와 실업

(단위 %)

| 98년 하반기 | 상시고 | 임시일고 | 자영업자 | 무급가족 | 실업 | 비경제활동 |
|---------|-------|-------|-------|-------|-------|-------|
| 상시고 | 97.17 | 1.03 | 0.22 | 0.03 | 0.64 | 0.90 |
| 임시일고 | 1.26 | 85.27 | 2.76 | 1.01 | 3.11 | 6.58 |
| 자영업자 | 0.07 | 2.32 | 93.37 | 0.59 | 0.41 | 3.25 |
| 무급가족 | 0.14 | 1.97 | 2.14 | 82.30 | 0.10 | 13.35 |
| 실업 | 1.13 | 15.45 | 1.90 | 0.29 | 76.29 | 4.93 |
| 비경제활동 | 0.09 | 1.76 | 0.57 | 0.98 | 0.90 | 95.70 |
| 99년 상반기 | 상시고 | 임시일고 | 자영업자 | 무급가족 | 실업 | 비경제활동 |
| 상시고 | 98.35 | 0.55 | 0.16 | 0.09 | 0.39 | 0.46 |
| 임시일고 | 1.31 | 86.14 | 2.22 | 1.28 | 2.88 | 6.17 |
| 자영업자 | 0.15 | 0.97 | 95.77 | 0.78 | 0.59 | 1.75 |
| 무급가족 | 0.06 | 1.34 | 1.38 | 93.37 | 0.30 | 3.54 |
| 실업 | 2.34 | 16.10 | 2.96 | 0.75 | 70.53 | 7.32 |
| 비경제활동 | 0.19 | 2.65 | 1.68 | 2.20 | 0.93 | 32.35 |

자료: 〈표 II-6〉과 동일.

임시고일고의 경우가 3.15%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경제활동으로의 이행은 임시고/일고와 무급가족종사자층에서 높게 나타났다.(<표 II-9> 참조)

한편 실업상태로부터 재취업한 사람들 중에서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보면 임시고 일고로의 재취업률이 15-16%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이 자영업(2-3%), 상시고(1-2%)의 순이다. 이는 동 기간중 신규창출된 일자리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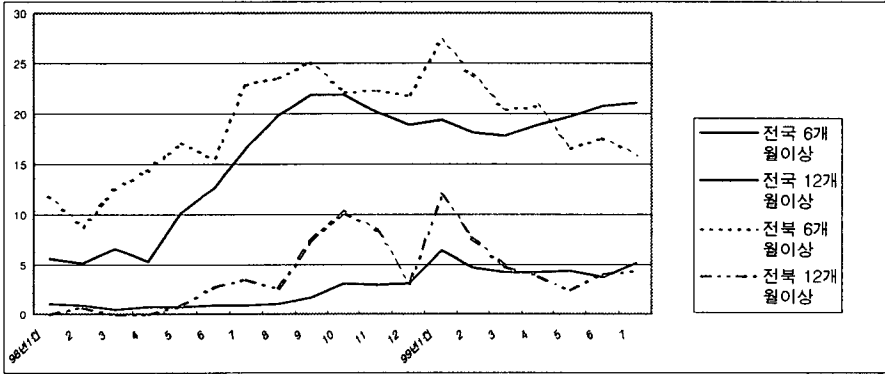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비경제활동으로부터 재취업한 사람 중에서도 역시 임시고 일고로의 재취업확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의 순이고 상시고로의 취업은 매우 적다. 실업으로부터의 재취업에 비해 비경활로 퇴장한 후의 재취업에서는 상시고로의 취업확률이 급격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비경활로 퇴장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주변적 연령층에서 많았던 점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으로부터 탈출하여 (재)취업하는 사람들의 종사상지위를 놓고 판단해 보자면, 신규창출된 일자리가 임시직 일고 무급가족종사자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7) 실업의 장기화 추세

장기실업자의 전국적 추세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IMF사태 직후에는 쏟아지는 신규실업자로 인하여 전체 실업자중에서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하락하였으나 98년 2-4분기 이후 이 비율은 급격히 상승하여 99년 상반기 이후에는 전체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 <그림II-2>를 보면 6개월 기준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98년 5월에서 9월 사이에 급증하였으며, 12개월 기준 장기실업자의 비율은 98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급증하여 99년 1월이후로는 그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장기실업자 비율은 6개월이상 실업자나 12개월 이상 실업자 모두 전국수준을 대체로 웃돌고 있어서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다만 99년2/4분기 이후에는 전국수준보다 다소 하락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겠다(<그림II-2> 참조). 이는 월평균 구직기간의 분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전라북도의 경우 실업자들의 평균구직기간이 전국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II-3> 참조) 이는 노동력 전이를 분석에서 실업탈출률이 전북의 경우가 전국보다 낮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위집단별로 장기실업자의 비중의

〈그림 II-2〉 최근1년간 장기실업자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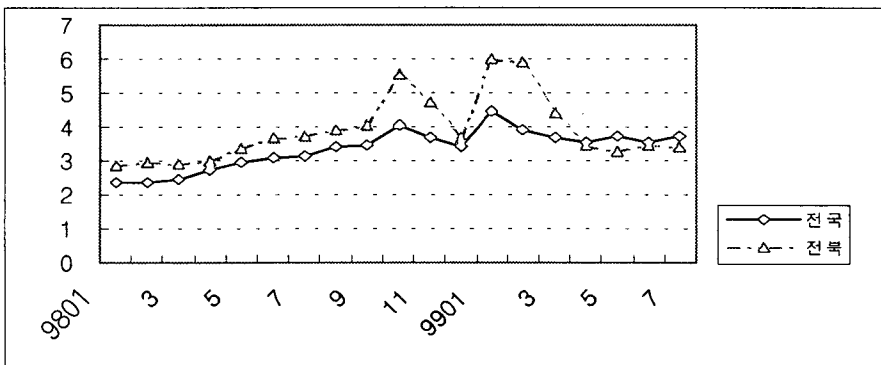
(단위 개월)



자료 : 〈표 II-6〉과 동일

〈그림 II-3〉 월평균 구직기간 추이

(단위 개월)



자료 : 〈표 II-6〉과 동일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의 장기실업률이 여성의 장기실업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¹²⁾

이는 여성의 경우 실직이 실업으로 연결되기 보다는 비경제활동으로 퇴장하는 실망 노동자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최화정, 1999). 실업률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장기실업률이 낮을 경우에는 장기실업률이 높을 경우에 비해서 문제가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실업률이 낮다는 것은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높고 실업자내부의 유동성이 커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가 가져다줄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다(신동균, 1999). 그러나 실업기간이 장기화될수록 실업으로부터의 탈출확률은 낮아진다. 만약 실업자중 일부가 장기실업자층으로 퇴적된다면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 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 전북지역 실업자 실태조사 결과

1) 전북지역 실업자 조사 개요

본장에서는 전북지역의 실업자 실태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실업자들의 이전직장, 구직활동, 정부실업대책에 대한 태도, 생활실태, 사회심리적고통, 자녀문제, 가족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실태조사는 99년 4월 20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전주시에서 실시되었으며, 표집은 노동사무소 구직신청자, 재취업 직업훈련생, 공공근로참가자를 대상으로 할당표집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자료의 조사결과를 98년도의 실업자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기로 하겠다.¹³⁾

12) 전북지역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포함된 표본의 사례수가 적어서 하위집단별 장기실업자의 하위집단별 비중을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체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학력별로는 고졸이상이 중졸이하보다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학력자층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고학력실업자들의 경우 의증임금이 높고, 또 고학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련수준에 적합한 일자리가 부족한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직유무별로 살펴보면 IMF 이전에는 대체로 장기실업자의 비중이 전직실업자 중에서 더 높았으나 IMF 직후부터는 신규실직자층에서 장기실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기하강기에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99년 이후부터는 이런 경향은 다시 조금씩 바뀌어서 양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근접하거나 혹은 역전되고 있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중 남자는 59.3% 여자는 40.7%이다. 그리고 학력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상대적으로 99년 표본이 고학력, 20대가 많은 편이다.

2) 실직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들

(1) 실직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산업분포

98년 전북조사에서는 제조업과 SOC산업, 건설업 출신이 많고 99 전주조사에서는 SOC산업, 제조업, 개인서비스업 출신이 많다. 성별로는 남성은 제조업, 건설업 출신이 많고 여성은 개인서비스업 출신이 많다. 구직희망산업은 이전 산업에 비해서 제조업과 건설업이 줄고 SOC산업과 개인서비스업이 늘어났다. 이는 이전의 제조업, 건설업 종사자중 상당수가 해당산업에서의 구직을 포기하고 개인서비스업이나 SOC산업에서 새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실직이전 직장의 직종과 희망직종의 분포를 비교해보면 98년조사에서는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블루칼라 직종으로의 하향구직 경향이 비교적 뚜렷하다. 그러나 99년 조사에서는 연령별로 50대 미만층이 하향구직 성향을 보이거나 전체적으로는 하향구직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13) 98년도 조사는 전주, 익산, 군산의 3도시에서 지방노동사무소 구직신청자, 재취업훈련생, 공공근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98년 전북조사와 99년도 전주시 조사는 가구조사가 아니므로 대표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99년 전주시 조사에서는 99년 4월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서 전북지역 실업자들의 연령별, 성별, 학력별 구성비를 구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집시 표본을 할당하였다. 상대적으로 99년 조사에서는 98년조사에 비하여 20대와 대졸층이 많이 표집되었는데 이는 실제 실업자 구성비가 1년동안에 변한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고, 표본이 다른데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98년도 자료를 99년도의 자료와 동일하도록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원래의 결과와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응답의 경향성은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 이후부터는 가중치를 주지 않은 결과를 그대로 비교에 사용하였다(남춘호, 1998). 다만 전북지역의 실업자 실태조사는 비체계적 할당표집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확률표집에 기초한 전국조사자료, 예컨대 노동연구원과 보사연의 1998년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표 III-1〉 실직 이전의 급여

(단위 %)

| | 98 전 북 | | | 99 전 주 | | |
|------------|--------|------|------|--------|------|------|
| | 남 자 | 여 자 | 전 체 | 남 자 | 여 자 | 전 체 |
| 70만원 미만 | 6.1 | 46.8 | 17.4 | 9.9 | 58.5 | 28.3 |
| 70-100 미만 | 20.9 | 28.9 | 23.1 | 20.6 | 26.5 | 22.9 |
| 100-150 미만 | 36.5 | 18.5 | 31.5 | 34.9 | 8.6 | 25.0 |
| 150-200 미만 | 22.2 | 2.9 | 16.8 | 16.6 | 3.5 | 11.6 |
| 200만원 이상 | 14.3 | 2.9 | 11.1 | 18.0 | 2.9 | 12.3 |
| 합 계 | 446 | 173 | 619 | 616 | 373 | 989 |

자료 : 98전북조사와 99전주조사.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주13을 참고하기 바람.

이하에서는 별도의 출처표시는 생략함.

〈표 III-2〉 직장을 그만둔 이유

(단위 %)

| | 98 전 북 | 99 전 주 | | 98 전 북 | 99 전 주 |
|-------|--------|--------|------|--------|--------|
| 직장 이전 | 5.4 | 6.2 | 도 산 | 25.2 | 28.2 |
| 결혼 출산 | 4.1 | 2.9 | 기간만료 | 1.3 | 3.4 |
| 질 병 | 3.1 | 5.2 | 정년퇴직 | 3.6 | 0.6 |
| 개인사업 | 3.1 | 2.0 | 명예퇴직 | 6.0 | 5.2 |
| 인사조치 | 8.3 | 9.3 | 정리해고 | 21.4 | 14.9 |
| 개인사유 | 7.4 | 10.5 | 권고사직 | 7.5 | 5.4 |
| 징계해고 | 2.1 | 1.9 | 기 타 | 1.5 | 4.2 |

(2) 실직이전의 급여

실직이전의 급여를 보면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출신이 전체 응답자의 51.2%를 차지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85%가 저소득층 출신인데 이들 중 50.2%가 자신이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여성가장의 경우에는 91.5%가 자신이 가족의 생계주책임자라고 응답하여 여성저소득 실업가구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표III-1〉참조)

한편 이전직장의 임금과 의중임금(reservation wage)을 비교한 결과 재취업을 위해서는 임金的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하향구직 경향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98년에 비해 99년에는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3) 실직 사유

실직사유를 보면 도산, 휴폐업, 조업단축이 28.2%로 가장 많다¹⁴⁾. 그다음이 정리해고(14.9%)이다. 그리고 권고사직, 징계해고등 비자발적 실업을 모두 합하면 63.2%이다. 98년 조사에서는 65.6%가 비자발적 실업으로 나타났다.(〈표III-2〉 참조)

3) 실업대책과 구직활동

(1) 퇴직금

퇴직금제도는 사회복지제도가 미비한 한국의 상황에서 마련된 특수한 제도이다. 사회복지제도가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된 실업자들은 퇴직금을 기반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아보거나 이를 밑천 삼아 자영업을 모색하곤 했다. 실제로 99년 전주조사에서도 응답자의 11.9%가 실직이후 자영업을 해보았다고 응답했으며, 23.6%는 자영업을 해 볼 생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동안의 사회이동 연구에서도 노동자층으로부터 자영업층으로의 이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이재열, 1999)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나 98년 조사에서 24.9%가 실직시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99년 조사에서도 15%가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98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7.4%가 체불임금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99년 조사에서도 12.6%가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¹⁵⁾

퇴직금의 액수는 천만원 미만인 70.1%이나 4.9%는 1억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14) 경제위기시에 중소기업의 도산과 어음부도율이 높은 이유중의 하나로는 기업간의 전근대적 하청관계를 들 수 있다. 전근대적 하청관계속에서는 대체로 모기업과 하청기업, 하청기업과 재하청기업사이의 대금결제가 6개월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한 기업의 부도가 지역의 관련 기업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농후하다. 전근대적인 하청관계를 정비하는 것이 지역 중소기업의 부도율을 낮추고 그로 인한 실업자의 양산을 막는 근본적 대책의 하나로 판단된다.

15) 정부에서는 이를 막기위해 노사정합의하에 임금채권변제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변제금 상한액 등에서 한계가 뚜렷하여 아직 그 효과가 전반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성균, 1999).

〈표 III-3〉 퇴직금 수령 여부

(단위 %)

| | 98 전 북 | 99 전 주 |
|-------|--------|--------|
| 받 음 | 51.9 | 42.9 |
| 곧 받음 | 9.5 | 5.3 |
| 받지 못함 | 24.9 | 9.6 |
| 해당 없음 | 13.7 | 42.2 |
| 합 계 | 611 | 991 |

퇴직금이 1억 이상인 층과 1000만원 미만인 층에 대한 실업대책은 달리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표III-3〉)

(2) 실직년도와 구직기간

실직년도 분포를 보면 98년 조사에서는 60.4%가 98년 이후 실직자였으나 99년 조사에서는 77.8%가 IMF 이후에 실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들의 평균구직기간은 6.4개월이며, 구직여부와 상관없이 직장을 그만 둔 이후 현재까지의 실직기간은 평균 7.6개월이다.¹⁶⁾

실업자의 특성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평균구직기간이 길며, 연령별로는 노령층일수록 구직기간과 무업기간이 길다. 한편 구직기간은 신규실업자가 더 길고 실업기간은 전직실직자가 더 길다. 직종별로는 생산직 출신이 사무직 출신보다 구직과 실직기간이 더 길고, 실직사유별로는 구직기간은 비자발적 이직자가 더 길지만, 실업기간은 자발적 이직자가 더 길다. 이전산업별로는 제조업종사자가 구직기간이 가장 길

16) 비정상적인 장기실업자들이 평균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구직이나 실직기간이 24개월이하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다. 참고로 1998년 9월기준으로 노동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는 구직기간이 4.71개월 실업기간이 6.59개월로 나왔으며(김재호, 1999),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구직기간을 가지고 본인이 계산해 본 결과는 99년 4월 현재 전국이 3.54개월 전북은 3.45개월로 나왔다.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실업자 실태조사는 비체계적 할당 표집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구조사를 기초로 체계적 확률표집을 이용한 노동연구원조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와의 엄밀한 비교는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 한편 노동연구원 자료의 실직기간과 본연구의 실직기간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실직기간이라기 보다는 무업기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구직기간보다는 길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표 III-4〉 실직기간 및 구직기간

(단위: 개월)

| 전 체 | | 실직기간 | 구직기간 |
|--------------|------------|--------------------|--------------------|
| | | 9.4개월 ^a | 7.5개월 ^a |
| 교육수준 | 중졸이하 | 12.2 | 9.0 |
| | 고졸 | 9.5 | 7.6 |
| | 대졸이상 | 7.5 | 6.3 |
| 연 령 | 20대 | 7.9 | 6.7 |
| | 30대 | 8.7 | 6.6 |
| | 40대 | 10.7 | 8.0 |
| | 50대 | 12.6 | 10.1 |
| 취업자유무 | 취업자 있는 가구 | 8.6 | 6.6 |
| | 취업자 없는 가구 | 10.2 | 8.5 |
| 신규졸업자 | 신규졸업자(비신규) | 11.4(9.2) | 6.7(7.6) |
| 생계책임자 | 주책임자(비책임자) | 10.0(8.6) | 8.3(6.5) |
| 직종 | 사무직(생산직) | 8.2(11.1) | 6.6(8.7) |
| 실직사유 | 자발(비자발) | 10.7(8.9) | 6.9(7.7) |
| 최저생계비이하 빈곤가구 | 빈곤가구(기타가구) | 10.6(7.5) | 8.6(5.9) |
| 혼인상태 | 기혼자(미혼자) | 10.1(8.2) | 7.9(6.9) |
| 이전산업 | 제조업 | 11.2 | 8.3 |
| | 건설업 | 8.9 | 7.7 |
| | SOC | 7.7 | 6.5 |
| | 개인서비스업 | 8.3 | 7.2 |
| | 음식숙박업 | 14.3 | 8.0 |
| 종사상지위 | 정규직 | 8.9 | 6.9 |
| | 임시직 | 11.1 | 8.9 |
| | 일용직 | 9.5 | 9.1 |
| | 자영업 | 12.9 | 8.8 |

a : 2년 이상의 장기실업자나 구직자를 제외하면 실업기간은 평균 7.6개월, 구직기간은 6.4개월이다.

며, 종사상지위별로는 일용직과 임시직 출신이 구직기간이 길다. 그렇지만 하위집단별 실직기간과 구직기간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므로 그 원인에 대한 좀 더 정밀한 분석이 요구되나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¹⁷⁾

전체적으로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수준에 비해 구직기간이나 실업기간이 길어서 장기실업이 우려되며, 하위집단별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장기실업이 특정한 층에 집중되는 경향도 감지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80년대 경기침체에 대량실업이 발생한 이후 경기회복기에도 이들 중 상당수가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실업자로 전락하여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장기실업은 한 번 발생한 후에는 대책을 강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음을 유럽국가들의 경험이 보여주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회안전망이 미비한 한국의 경우에는 장기실업화 현상에 대해 더욱 세밀한 분석과 대책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III-4>>참조)

(3) 구직활동

구직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64.5%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끝까지 구직활동을 해보겠다고 대답하였고, 26.0%는 취업이 안되면 자영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농업을 해보겠다는 응답자는 3.3%에 불과하여 귀농을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실업자들은 아주 적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한편 취업이 안되면 경제활동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10.3%로 남성의 3.4% 보다 높게 나타나 여성실업자들이 비경제활동인구로 실망노동자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구직 방법으로는 신문, TV, 생활정보지등의 구인광고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98년과 99년 모두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친구나 친지의 소개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98년 조사에 비해 99년 조사에서는 공공구직창구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7.5%에서 52.7%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상의 구인광고 이용자가 증가한 점 역시 눈에 띄는데 이는 99전주조사에 20대 대졸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된 때문으로 보인다.¹⁸⁾ <<표 III-5>> 참조)

17)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북 표본은 모두 3000명 정도이며 따라서 그 중 실업자수는 150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150명을 가지고 하위집단별 구직기간과 실직기간을 분류할 경우 각 셀에 해당되는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 반면에 본 조사는 엄밀한 의미의 확률표집이라고 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세밀한 차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18) 이러한 결과는 98 전북조사와 99 전주조사의 응답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98년 조사에서는 구직방법중 2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였고 99년 조사에서는 해당되는 것을 모두 표기하라고 하였으므로 모든 항목에서 99년 조사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 주요 구직 방법

(단위 %)

| | 98 전 북 | 99 전 주 |
|------------------------|--------|--------|
| 친구나 친지의 소개 | 54.0 | 47.8 |
| 신문, TV,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 | 58.1 | 65.1 |
| 공공 구직창구를 통해 | 27.5 | 52.7 |
| 시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 2.0 | 14.1 |
| 학교, 학원 등의 추천 | 3.6 | 12.5 |
| 혼자 직접 찾아다니면서 | 29.9 | 25.6 |
| 민간용역업체 | 2.4 | 5.8 |
|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 | 3.2 | 20.3 |
| 기 타 | 2.1 | 3.5 |
| 인력시장 | | 19.4 |
| 취업박람회 | | 19.2 |
| 합 계 | 663 | 1134 |

한편 6개월 이내의 재취업 가능성을 질문한 결과 46.8%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98년 조사의 29.1%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남성의 경우 54.7%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여, 실업자들도 작년에 비해 자신의 재취업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위집단별로는 대졸, 20대, 남성층이 낙관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중졸, 40~50대, 여성일수록 비관적 전망을 표명하였다.

4) 실직자들의 생활실태와 사회적 위기

(1) 가구소득 분포와 소득감소율

실직자들의 이전 직장소득분포에서 개인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1.1%나 됨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실직한 이후 현재의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59.1%나 된다. 98년 조사(48.4%)에 비해서 99년 조사에서는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III-6〉참조).

한편 97년 10월과 99년 4월의 가구소득을 비교하여 가구소득 감소율(99년 소득/97년 소득)을 계산해본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가구소득은 평균적으로 58.1%로 줄어

〈표 III-6〉 가구소득 분포

(단위 %)

| | 98 전 북 | 99 전 주 |
|----------|--------|--------|
| 70만원 미만 | 34.8 | 47.7 |
| 100만원 미만 | 13.6 | 11.4 |
| 150만원 미만 | 22.8 | 18.7 |
| 200만원 미만 | 13.6 | 9.6 |
| 200만원 이상 | 15.3 | 12.7 |
| 합 계 | 523 | 1064 |

들었다. 가구소득의 감소폭은 저소득가구일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응답자가 생계책임자인 경우(46.0%)가 생계책임자가 아닌 경우(73.0%)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에게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실업자의 54%가 자신이 생계책임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중 47.5%는 가구원중 다른 취업자가 전혀없다고 답하여 실업자 가구의 소득감소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가구의 평균소득은 90만6천원이었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최소생계비는 월 평균 88만9천원이었다. 그런데 여성가장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평균이 37만원인데 비해 주관적 최소생계비는 76만5천원이라고 응답하여 생계유지가 매우 곤란함을 보여주었고, 50대이상 실업자 가구의 경우에도 가구소득은 57만3천원인데 주관적 최소생계비는 97만2천원이라고 응답하여 양자간의 차이가 매우 컸다. 한편 이들 가구 중에서 보건사회연구원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98년 10월에 발표한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응답자의 45.6%가 최소생계비에 미달하는 빈곤가구로 나타났으며, 이중 여성가장가구는 81.7%, 50대이상 실업자가구는 70.3%가 빈곤가구로 드러났다. (〈표III-7〉 참조)

(2) 경제적 고통과 생계유지 방법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생계유지 방법을 물어본 결과 '그동안의 저축'(55.3%)에 의존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는 '가족 중 다른 취업자의 소득'(43.2%)에 의존한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대체로 퇴직금, 실업급여, 가끔씩 날품이나 아르바이트에 의해 생계

〈표 III-7〉 가구소득

(단위 만원.%)

| | 가구소득 (평균) | 주관적 최소생계비 | 주관적 최소생계비 미달가구 비율 | 최소생계비 미달가구 비율 ^a |
|------------|--------------|--------------|----------------------|-------------------------------|
| 전 체 | 90.6만원 | 88.9만원 | 59.9% | 45.6% |
| 취업자 없는 가구 | 49.4 | 81.2 | 81.4% | 67.6% |
| 여성가장가구 | 37.0 | 76.5 | 87.7% | 81.7% |
| 환자가정 | 58.3 | 81.9 | 76.6% | 65.0% |
| 일용직 실직자가구 | 64.3 | 81.3 | 71.1% | 66.2% |
| 20대 실업자 가구 | 133.8 | 86.2 | 34.2% | 21.7% |
| 30대 실업자 가구 | 78.1 | 82.0 | 62.9% | 47.0% |
| 40대 실업자 가구 | 54.5 | 94.9 | 81.1% | 69.3% |
| 50대 실업자 가구 | 57.3 | 97.2 | 84.0% | 70.3% |

a: 보건사회연구원 발표 1998년 10월 지역별 가족규모별 최소생계비 기준.

〈표 III-8〉 생계유지 방법

(단위 %)

| | 98전북 | 99전주 | | 98전북 | 99전주 |
|--------------|------|------|---------------|------|------|
| 다른 식구의 소득 | 36.5 | 43.2 | 실업급여 | 19.0 | 26.6 |
| 퇴직금 또는 퇴직수당 | 29.0 | 25.6 | 공공근로사업 | | 34.0 |
| 친척, 친지의 도움 | 6.9 | 10.6 | 정부의 대부사업 | | 6.3 |
| 그동안의 저축 | 46.1 | 55.3 | 영세민 생활보호사업 | | 4.9 |
| 이자, 집세등 재산소득 | | 9.0 | 직업훈련 수당 | | 10.8 |
| 부동산을 팔거나 줄여서 | 2.5 | 6.3 | 농산물재배, 판매 | | 5.5 |
| 빚을 얻어서 | 8.5 | 30.9 | 가끔씩 낚음, 부업 | 21.7 | 25.6 |
| 사회기관의 도움 | | 3.6 | 가재도구, 물품을 팔아서 | | 5.7 |
| 이웃의 도움 | | 2.4 | | | |

를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 (〈표III-8〉참조) 특기할 점은 '빚을 얻어서' 라는 답변이 98년 조사에서는 8.5%였으나 99년 조사의 결과는 30.9%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실업의 장기화로 그동안의 저축이 고갈되어 부채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밖에 실업급여에 의존한다는 응답자는 26.6%에 불과하였다.¹⁹⁾

공공근로 사업 의존자는 38.6%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실업자 생계지원 사업중, 실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영세민 생활보호사업등은 그 역할이 별로 크지 않고 대부분의 실직자들이 저축, 다른 가구원의 소득, 부채, 퇴직금, 부업 등 사적수단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실업자에 대한 실질적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이 여전히 미비함을 보여주는 증거라 하겠다.

정부에서는 2000년도 실업예산을 대폭 감축하면서 공공근로나 한시적 생활보호등의 단기적 실업대책은 지양하고, 대신 내년 10월부터는 국민기초생활법의 시행을 통해 저소득 실업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책을 정비해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나 2000년도의 정부예산안을 보면 기존의 생계보호자와 한시생활보호자를 합하여 모두 166만명을 수혜대상으로 정하여 99년의 192만명에 비하여 그 수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 99년도의 수준에서도 전북지역 조사에서 나타난 바로는 실업자중 생활보호나 한시적 생활보호를 받은 사람은 5%미만인데 2000년에는 그 수혜범위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99년조사결과 최소생계비 이하의 빈곤가구는 전체 응답자의 45.6%에 달하였으며, 이같은 빈곤실업가구 45.6%중 5%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런 상태에서 이들이 크게 의지했던 공공근로마저 50%가까이 축소되고 나면 실제로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공공근로나 다른 생계비지원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업대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원래취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저선을 정하고 그 이하의 빈곤가구를 동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것임에 비해 정부에서는 거꾸로 예산에 맞추어 최저선을 산정하는 전도된 방식의 접근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실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겪는 금전적 어려움으로는 본인과 가족의 기본 생계비 부족을 가장 먼저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녀교육비를 들고 있다. 그런데 98년 조사에 비해 99년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각종 공과금과 세금 지출의 어려움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36.9%에서 55.1%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98년 조사에서는 막연히 어려움을 예상하고 응답한 것이었다면 99년 조사에서는 보다 실제적인 경험에

19) 고용보험상의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을 전사업장으로 확대적용하였으나 99년 6월말 현재 여전히 고용보험 가입자는 피용자의 46.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용보험동향, 1999 가을, 13쪽)

〈표 III-9〉 실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겪는 금전적 어려움 중 세가지

(단위 %)

| | 98 전 북 | | | 99 전 주 | | |
|--------------|--------|------|------|--------|------|------|
| | 남 자 | 여 자 | 전 체 | 남 자 | 여 자 | 전 체 |
|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 | 87.0 | 72.5 | 82.7 | 72.5 | 59.1 | 67.0 |
| 자녀의 교육비 | 50.1 | 54.5 | 51.4 | 41.3 | 48.1 | 44.1 |
|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 25.8 | 17.5 | 23.3 | 18.6 | 18.2 | 18.5 |
| 각종 공과금, 세금 | 36.5 | 38.0 | 36.9 | 55.1 | 55.2 | 55.1 |
| 주택자금(전세금 등) | 14.7 | 13.5 | 14.3 | 17.4 | 19.3 | 18.2 |
| 각종 채무의 변제 | 16.4 | 9.0 | 14.2 | 20.9 | 20.9 | 20.9 |
| 적금, 보험료 등 | 21.3 | 30.0 | 23.9 | 21.8 | 27.0 | 23.9 |
| 재취업을 위한 훈련비용 | 8.1 | 11.0 | 9.0 | 13.9 | 13.6 | 13.8 |
| 용돈의 감소 | 14.7 | 16.0 | 15.1 | 17.9 | 22.0 | 19.5 |
| 기 타 | 1.1 | 2.5 | 1.5 | 1.2 | 1.1 | 1.2 |
| 교 통 비 | | | | 16.2 | 10.1 | 13.7 |
| 합 계 | 469 | 200 | 669 | 661 | 455 | 1116 |

기초한 응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채무변제의 어려움을 꼽은 응답자의 비율도 14.2%에서 20.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7.1%가 단전단수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4.5%는 경매로 차압을 당하였다는 응답과 상통하는 것이다. (〈표III-9〉참조)

(3) 사회적 위기 : 실직, 심리적 고통, 자아불안, 가족의 해체, 상대적 박탈감.

사회적 갈등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경우 결국, 가족의 해체, 자아의 분열, 사회적 갈등과 같은 사회적 위기로 연결되기 쉽다. 특히 우리사회의 경우 아직 종합적인 복지체제의 미비로 초기의 경제적 위기가 사회적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은 늘 잠재해 있다고 하겠다.

먼저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문제, 주거문제, 의료문제등으로 나타났 다. 자녀의 학원수강을 중단한 응답자는 31.8%로서 학령아동이 없는 비해당자 55.1%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뿐만아니라 휴학 및 군입대 10.2%, 진학포기 10% 등으로 나타났으며 결식의 경우도 9.6%도 나타났다. 한편 주거문제에서도

〈표 III-10〉 실직이후의 자녀문제, 주거문제, 의료문제

(단위 %)

| | 99 전 주 | | |
|--------------------|--------|------|------|
| | 그렇다 | 아니다 | 비해당 |
| 자녀의 학원수강 중단 | 31.8 | 13.0 | 55.1 |
| 자녀가 휴학및 군입대 | 10.2 | 18.4 | 71.5 |
| 끼니를 거르거나 도시락 못 씀 | 9.6 | 29.4 | 61.0 |
| 자녀의 진학 포기 | 10.5 | 24.0 | 65.5 |
| 아이나 부모를 시설에 맡김 | 3.0 | 32.2 | 64.8 |
| 집을 팔고 이사(전, 월세 줄임) | 15.6 | 38.2 | 46.2 |
| 적금이나 보험 해약 | 60.1 | 20.4 | 19.5 |
| 단전이나 단수를 당한적이 있다 | 7.1 | 51.8 | 41.0 |
| 경매 차압 | 4.5 | 48.1 | 47.5 |
| 치료중단 | 15.1 | 42.5 | 42.4 |
| 심각하지 않으면 병원이용않음 | 43.1 | 28.3 | 28.6 |
| 치료기관을 더 싼곳으로 옮김 | 36.8 | 30.7 | 32.4 |
| 의료보험료 못 냈 | 22.4 | 49.5 | 28.2 |

〈표 III-11〉 경제전망, 상대적 박탈감, 구조조정에 대하여

(단위 %)

| | 99 전 주 |
|--|-------------|
| | 그렇다 / 매우그렇다 |
|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형편이 나아질 것이다 | 81.7 |
| IMF 시대에도 못 사는 사람만 더 못살게 될 뿐 잘 사는 사람은 걱정 없다 | 94.2 |
|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감수해야 한다 | 74.6 |
| 대책없는 정리해고 중단해서 실업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 | 88.7 |
| 실업자만 고통전담 -실업자 시위라도 벌여야 | 46.4 |

〈표 III-12〉 실직을 전후하여 겪는 사회심리적 고통

(단위 %)

| 질 문 | 98 전 북 | | 99 전 주 | |
|-----------------------------------|-----------|--------------|-----------|--------------|
|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편이다 | 매우 그렇다 | 대체로 그런편이다 |
| 실직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 26.0 | 22.3 | 32.5 | 41.7 |
| 실직한 이후 공포감을 느꼈다 | 35.0 | 33.3 | 26.8 | 34.5 |
| 실직한 이후 왜 하필이면 나일까 하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 28.2 | 31.5 | 23.7 | 30.9 |
| 실직한 이후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 | 27.8 | 29.1 | 20.7 | 29.8 |
| 실직한 이후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 | 11.2 | 21.6 | 14.7 | 18.4 |
| 때로 자살의 유혹을 느낀다 | 10.0 | 12.5 | 9.2 | 11.0 |
| 실직한 이후 친구나 친지 등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 | 16.7 | 30.2 | 19.7 | 28.8 |
| 실직한 이후 한동안 가족에게는 실직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 | 11.9 | 18.9 | | |
|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고통스럽다 | 44.9 | 24.8 | | |
| 자녀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 | | | 8.7 | 16.1 |

집을 팔고 전월세를 줄인 경우가 15.6%, 단전 단수 경험자가 7.1%로 나왔다. 그리고 보건의료의 문제도 심각해서 22.4%는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였고 43.1%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실직자가정의 보건의료 문제가 악화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심지어 장기질환자의 치료를 중단하였다는 응답자도 15.1%나 되었다.((표III-10)참조)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탈선(3.5%, 비해당 64.6%)이나 학업성적 하락(14.3%, 비해당59.9%)으로 이어졌으며, 하루종일 낮잠이나 TV시청만 하거나(39.8%), 음주소란을 벌이거나(15.2%), 가족이나 이웃간에 불화(13.2%)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편 실직자들은 장래전망에 대해서는 경제가 회복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형편이 나아질 것이라는데 81.7%가 동의하였으나 IMF하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에 대해 94.2%가 동의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46.4%는 실업자만 고통을 전담케하고 있으므로 시위라도 벌여야 한다는데 46.4%가 동조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잠재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경제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며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데 74.6%가 동조했으면서도 동시에 대책없는 정리해고는 중단하고 실업자 발생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에 88.7%가 찬성함으로써 다소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표III-11)참조)

마지막으로 실직자들의 사회심리적 고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74.2%가 실직이전에는 실직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으나 54.6%의 응답자들이 실직당한 후 '왜 하필 내가 실직당해야 하는가'라는 분노와 배신감에 시달렸으며, 61.3%는 실직한 이후 공포감에 휩싸였고 50.5%는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48.5%는 대인 기피증을 보이고 있으며, 33.1%는 심각한 가정불화가 발생했다고 응답하였고 심지어 20.2%는 자살유혹을 느낀 적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물론 이러한 조사로 실직자들이 경험한 사회적, 심리적 고통을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와같은 조사결과 는 실직자들의 심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엿보기에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재갑외, 1998, 조은경, 1999) (<표III-12>참조)

4. 요약 및 결론

1997년 11월 대외지불 불능사태로 시작된 외환위기가 경제위기로 확산되면서 97년 4/4분기에는 2.5%에 불과하던 전북지역의 실업률은 99년 2월 8.4%로 피크를 이루었으나, 그후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전북지역 노동시장의 전반적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실업률 통계로는 파악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준실업상태에 있는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의 증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고, 직업별로는 IMF 초기에는 생산직의 감소가 최근에는 사무직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취업 및 실업과 비경제활동 사이의 노동력 전이율을 살펴보면 남성과 핵심연령층에서는 취업정착률이 높지만, 일단 실업자가 되면 실업으로부터의 탈출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비경제활동으로의 이동이 커서 실업률이 낮게 나오며, 이는 실망노동자효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중사상지위별로는 상대적으로 상시고와 자영업자층에서 취업정착률이 높다. 실업이나 비경활상태로부터의 (재)취업 시에는 압도적으로 임시고/일고로의 취업이 많아서 98년하반기 이후 전북지역에서 창출된 일자리가 주로 임시고/일고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전북지역에서는 전국수준에 비해서 장기실업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전북지역의 경우 흔히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이 실업대란의 시기에 완충역

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본 연구의 결과 농업부문이나 생계형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력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나 그와같은 막연한 기대가 환상에 불과함을 일깨워 주었다.

한편 99년 전주 실업자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장기실업자나 여성실업자들이 그들이다. 여성실업자의 경우 50% 이상이 생계주책임자이며, 특히 여성가장 실업자의 경우에는 90%이상이 생계책임자이나 그들 대부분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장기실업자로 퇴직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저학력, 노령층, 임시임용직 실업자들의 경우에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정비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 장기실업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고용동향분석에서나 실업자 실태조사에서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다. 실업이 장기화되면 일반적으로 기간의존성효과나 이질성효과로 인하여 재취업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진다. 시장의 경쟁에 방치될 경우 재취업하기 힘든 계층을 표적집단으로하는 직업능력의 개발과 채용장려제도의 정비가 신속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생산적복지가 그 이름에 값하는 것이기 위해서는 시장경쟁력이 약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및 채용장려, 공공근로 등의 제반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실업자의 상당수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체불임금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정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제정하여 1998년 7월1일부터 일정액의 퇴직금수급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 법이 보장하는 퇴직금의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가 1998년 8월까지 집계한 체불퇴직금은 3358억원(4890업체 23만여명)이나, 99년 상반기까지 동법에 의해 지급된 도산기업의 체불퇴직금 규모는 207억원(278업체 1만2천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체가 많은 전북지역에서는 실태조사결과 실직사유 중 도산휴폐업등으로 인한 실업이 가장 많다. 따라서 이들 도산 기업의 실직자들도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퇴직보험제도의 도입등을 통해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를 정비하거나, 임시직 일용직 종사자들에 게도 퇴직금 혜택이 주어지도록 퇴직금 제도 자체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망노동자가 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경우나, 불완전취업자가 많은 전북지역의 실태를 고려하면 실업대책은 통계작성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실망노동자와 불완전취업자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취업자들의 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명시된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의 가입율 또한 매우 낮다. 점차 노동시장에서 다수를 차지해가고 있는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제반 제도적 보호장치들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화되어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의 강화등을 통하여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정하게는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은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며, 실업대책 역시 그 내실을 다질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 초기의 정부대책은 긴급구조적 생활보호대책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일정하게는 공공근로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사업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기의 실업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나치게 물량채우기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적지 않다. 예컨대 그간의 직업훈련은 실업이라는 실망상태에 두지 않겠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 그러다 보니 직업훈련예산의 경우 생계보전비 보다는 훈련기관에 돌아가는 훈련비가 더 커서 긴급구조라는 목적에도 부적합뿐더러 훈련기관들의 도덕적해이만 조장한 측면이 적지 않다. 이제 직업훈련의 경우에는 실업자들의 실질적인 직업능력 향상이 가능하도록 대상자수는 줄이더라도 훈련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하고 취업알선등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공공직업안정기관과 종합고용정보망이 부실한 점은 전주시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실업관련 각종 수혜를 받기 위하여 공공구직창구에 등록하는 실업자수는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실업자들은 공공구직망을 이용하기 보다는 신문 TV 생활정보지의 광고나, 친구나 친지의 소개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안정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직업훈련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취업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것이다.

한편 정부는 실업률의 하향안정화 전망속에서 생계보전위주의 단기적 실업대책은 축소하고 이를 2000년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흡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기초생활보장법의 원래취지대로 국민생활최저선을 확정하고 그 기준에 못 미치는 빈곤가구를 선별하는 작업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99년도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몇 %를 더해서 빈곤가구로 지정하고 그에 맞추어 예산도 몇 % 늘이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취지와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다. 전주시 실업자 조사 결과 실업자의 45.6%는 보건사회연구원에 제시한 객관적 최저생계

비 이하의 빈곤층으로 드러났으며, 이들 중 5%를 제외한 40.6%는 99년에도 생활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부예산안 대로라면 빈곤선 이하에서 허덕이는 실업가구의 다수가 2000년에도 실업대책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실업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실업대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의 대부분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지방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노동부등의 업무는 지방노동사무소가 관장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이에 실업대책조정기구는 존재하지만 형식적 기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렇지만 실업문제의 현장에 가장 근접해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실험성' '유연성' '접근용이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대책의 수립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별 연구에 의하면 현재의 여건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여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여주는 실업대책의 효과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²⁰⁾

그리고 실업전달체계에 있어서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군별로 실업자의 D/B가 구축되어야 하며, 실업자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화된 대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실업대책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람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 실업자를 대면접촉하는 일선 현장에서 '직무중심'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일선 공무원을 재훈련 담당, 공공근로 담당이 아니라 각 실업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실업자의 최초상담에서 유형별 서비스지원에 이르기까지 추적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도 지역 현장 공무원의 조정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강화시켜주어야 한다.

20) 일례로는 송파구와 부천시 사례를 참고하기 바란다(김봉겸, 1999; 경실련, 1999)

참고문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1999), 《정부의 실업대책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 종합보고서》.
- 국무총리실외(1999), 《증기실업대책》.
- 김재호·방하남(1998), 《IMF 시대 임금근로자들의 고용불안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기획예산처(1999), 《2000년 실업예산》.
- 김봉겸(1999), “송파구-실업문제 해결에 행정력 집중,”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동향》 제3호, 나남.
- 김상균(1998), “IMF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움 발표문.
- 김장호(1998), 《여성실업구조와 행태: 이행확률 추정을 통한 유량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갑·김은미·이선이·최우영(1998), 《실업스트레스의 변화》,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 김재훈(1999), “1997 경제위기의 지역적 전개구조” 한국산업사회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김형기(1999),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와 노동정책” 한국산업사회학회 19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남성일·이화영(1998), “최근 우리나라 실업의 특성 분석: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 통계청.
- 남춘호·이성호(1998), “IMF 경제위기와 전북의 실업문제”, 전북지역 실업문제 대책 제1차 토론회 발표문.
- 남춘호·이성호(1998) 《전북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문제》, 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 남춘호(1999), “종합주가지수 폭등에 묻혀버린 실업의 고통”, 《열린 전북》창간준비2호.
- 문진영(19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1998. 6.29. 사회보장 정책협의모임 실업대책 정책공청회발표문.
- 민주노총(1998), 《한국 실업현황과 민주노총의 과제》, 1998.9
- 방하남(1998), 《실질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실태 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
- 성경룡(1999), “실업과 사회해체: 총체적 위험사회의 등장” 《사회비평》 제19호. 247-275.
- 성제환(1999), “실업과 지역경제” 전라북도의회 {저소득층 및 실업대책 토론회} 발표문.
- 신광영·박준식(1999), “춘천 노동시장구조.” 1999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신동균(1999), 《실업의 장기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안병철(1999), “경제적 고통과 가족”, 《사회비평》 제19호. 65-83.
- 어수봉(1998), 《노동시장전망과 정책방향》, 한국노동연구원.
- 임영일(1999),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사관계: 변화의 조건과 전망”, 한국산업사회학회 99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 유재우(1984), "한국의 실업행태에 관한 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논문.
- 윤진호(1998), "IMF 체제와 고용조정", 《동향과 전망》 1998년 봄호.
- 윤진호(1998), "실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경제와사회》 제40호, 한울.
- 이병훈(1999), "미국 기업의 고용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다운사이징과 고성과작업체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41호.
- 이성균(1999), "한국의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산업사회학회 제2회 비관사회학대회 발표문 270-284.
- 어수봉(1994), 《한국의 실업구조와 신인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재열(1999), "취업경력에 대한 동태적 분석", 1999년 전기사회학대회 발표문.
- 임영일(1998), "코포라티즘에서 신자유주의로? - 멕시코 위기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관한 연구" 경남대 사회학과 《사회연구》 제11집 219-258.
- 장상환(1998), "실업자운동의 의의와 과제" 호남사회연구회 11주년 기념학술회의 《IMF체제하의 실업문제와 사회적 위기》 발표논문집 66-93.
- 정이환(1999), "미국의 고용불안과 실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경제와 사회》, 제41호.
- 조순경(1998), "민중적 시장경제와 유교적 가부장제", 《경제와사회》 제38호, 169-188.
- 조은경(1999), "춘천지역 실직자들의 심리적 반응", 《춘천실업리포트》 실업극복 춘천시민운동 협의회. 121-154.
- 조우현·강창희(1996), "고용정책 대상집단의 식별", 《산업관계연구》, 제6권.
- 조흥식(1998), "실업과 가족의 위기" 호남사회연구회 1998년 정기 학술회의, 《IMF체제하의 실업문제와 사회적 위기》 발표논문.
- 최강식·이규용(1998), 《우리나라 기업의 고용조정 실태》,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 Jackman, R. and Layard, R(1991), "Does Long-term Unemployment Reduce a Person's Chance of a Job? A time Series Test," *Economica*, 58.
- Blanchard, O. J. and L. H. Summers(1986), "Hysteresis and European Unemployment Problem," *NBER Macroeconomics Annual*, MIT Press, U.S.A.
- Heckman, J. and Borjas, G.(1980), "Does Unemployment Cause Future Unemployment?," *Economica*, 47.
- Huddle, Donald L.(1997), "Review Article: Post-1982 Effects of Neoliberalism on Latin American Development and Poverty: Two Conflicting View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881-897.

Layard, R.E. and Nickel, S.(1986), "Unemployment in Britain", *Economica*, 53, Supplement.

Rifkin, J.(1997), *The End of Work*, 이영호역 《노동의 종말》. 민음사.

Sorrentino, Constance, 1995, "International Unemployment Indicators,1983~ 93," *Monthly Labor Review*, Bureau of Labor Statistics, Department of Labor, U.S.A.

Junankar, P.N.(1998), "Very Long Term Unemployment, Luxembourg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Walsh, K.(1987), *Long-Term Unemployment: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MacMillan.

abstract

The Condition of Labor Market and Unemployment Rates in Chonbuk Province after the Economic Crisis

Choon-Ho Nahm

Economic crisis starting from foreign exchange crisis raised unemployment rates up to 8.4% in Feb. 1999, which used to be 2.5% in the last quarter of 1997. It was the climax. After that peak, unemployment rates declined. But the statistical unemployment index fails to reveal the discouraged workers and underemployed workers. The study on the employment composition by industry shows that many workers have lost their jobs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construction industry for the last two years: and that these workers have been less reemployed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self-employed service sector than expected.

When we analyze the transition probability in the labor market, we are led to conclude that employment stability rate is high among men and core-age group, but that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reemployed, once they are fired. On the other hand, among women employees, the transition probability from employment to non-economic activities is relatively high: unemployment rate is low, because of the effect of discouraged workers. And most of the workers who are reemployed in Chonbuk Province got their jobs in temporary and daily jobs.

We should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long-term unemployment rate in Chonbuk Province is higher than the national average. The job-seeking period is long among low-educated, old-age, blue-collar, temporary/daily workers. The possibility of reemployment is generally low among long-term unemployed workers because of duration dependence effect and heterogeneity effect. Workfare deserves the name only if the government tries to establish the relief measure for the poor unemployed workers, such as vocational training and education, job placement, subsidy for the reemployment.

Key words: economic crisis, unemployment rates, discouraged workers, underemployment, long-term unemployment.